

신용사면에 25만명 혜택 예상… 2금융, 우량차주 이탈 우려

2금융, 우량차주 확보 마케팅 수포
신용회복에 은행 대환대출 시도 땀
저신용자만 남아 부실 확대 가능성
카드사도 연체율 위험 부담만 증가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우량
고객 이탈 우려가 커진 반면 저신용차
주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금융위
원회는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출금을 상환한 중저신용
차주의 연체정보를 삭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발생
한 연체 이력을 지우면서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취
지다. 대상차주의 신용점수가 39점 안
팍으로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시름이 깊어지



금융당국이 신용사면 정책을 발표하면서 2금융권의 우량고객 이탈 우려와 저신용차주 유입 가
능성이 높아졌다. /뉴시스

고 있다. 중신용차주 25만명이 은행권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인 863점을 넘
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신용점
수가 오른 중신용차주가 은행권으로 대
환대출을 시도하면 지난해 애써 모집한
우량차주가 이탈하게 된다. 아울러 상
대적으로 취약한 차주만 남게 되면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부실 차주의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것 또한 부작용으로 지목된다. 연체율
증가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분석
에 무게가 쏠린다.
업계에서는 신용점수 700점대 차주
가 대환대출을 시도거나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당국은
차주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701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우량
차주 확보를 위해 쏟아부은 마케팅이
수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상
환능력이 그대로인데 대출 한도가 상승
하면 연체율 및 부실을 그대로 떠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에는 각별한 연체율
관리가 요구된다. 저신용자 15만명의
신용점수가 카드발급 기준인 645점을
상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와서다. 저신
용자의 경우 소비수준과 상환능력이 저
조한 만큼 시장점유율(MS) 확대를 기
대하기 어렵고 연체율만 더 오를 수 있
어 사실상 위험 부담만 높아졌다는 것.
카드론과 리볼빙 잔액이 상승세를 보
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리
볼빙 잔액은 연간 2000억원 가까이 상

승하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분기 전입카드사 8곳(신한·삼성
·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
카드)의 연체율 평균은 1.6%다. 지난
2022년 동기(0.98%) 대비 0.62%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 증가는 대손충
당금 추가 적립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
적에 악영향을 준다.

일각에서는 신용사면 이후 발생할 부
작용을 일축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모두 신용관리 정책을 장기간 확립한
만큼 일부 저신용차주가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풀이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 신용
평가모델 등 내부 가이드라인 및 규정
이 마련된 상태다”라며 “지나해를 시작
으로 건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만
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
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작년 휴면카드 140만장… 매일 4000장 장롱行

휴면카드 늘수록 매몰 비용 증가
금융사기 고도화에 도용 우려도

지난해 주요 카드사의 휴면카드가
150만장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매일 4000장 이상의 카드가 장롱 속
으로 들어간 셈이다. 휴면카드란 1년 이
상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의미한
다. 휴면카드는 카드사의 매몰 비용 증
가는 물론 금융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
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
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
드)의 누적 휴면카드는 1388만3000장
이다. 이를 은행 소속 카드사인 NH농
협카드까지 확대하면 1591만장에 달한
다. 같은해 1분기(1442만3000장) 대비
148만7000장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휴
면카드가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2019년
시행한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폐지가
자리 잡고 있다.

카드사 중 지난해 휴면카드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현대카드다. 지난해
4분기 현대카드의 휴면카드 수는 208만
8000장이다. 같은해 1분기(184만장) 대
비 24만8000장 증가했다. 그간 업계에
서는 휴면카드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
C)를 손꼽은 바 있다. 현대카드는 카드
업계 내에서도 PLCC 마케팅이 활발한
편이다. 지난해 말 현대카드의 휴면카
드 비중은 10.84%였다.

연간 휴면카드가 가장 낮게 증가한
곳은 하나카드다. 연간 6만2000장 상승
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카드업계에서
는 유일하게 휴면카드 비중이 줄었다.
지난해 말 하나카드의 휴면카드 비중은
14.91%로 연초(15.29%) 대비 0.38%포인트(p)
감소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 신규
회원 모집 전략, 영업 규모 등에 따라 휴
면카드 관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면서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트렌
트 변화가 빨라지고 있어 관리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

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
주현 금융위원장은 휴면카드 정리 시스
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휴면카드가
늘어날수록 카드사의 매몰 비용이 증가
할뿐더러 금융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카드사 입장에서
는 신용카드 출시를 위해 투입한 개발비와
인건비 등이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다.

여전히 금융 범죄 악용 우려도 남아
있다. 소비자가 방치하고 있는 만큼 도
용 등의 피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금융 범죄 기법
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애써 만
들어 놓은 신용카드가 방치되면 분별
손해로 이어지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
만 휴면카드로 이어지는 상품의 성격
등을 파악해 다음 상품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만큼 득과 실이 모두 존재한다
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KB금융, 미래 혁신기술 선도 ‘KB스타터스’ 모집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스타트업
4월 말 경 약 20여 곳 최종 선발

KB금융그룹은 다음달 23일까지 유
망 스타트업이 KB금융의 미래 협업과
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해 2024년 상반기 ‘KB스타터스’를 모
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
관인 창업진흥원의 ‘창업도약패키지대
기업 협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되
며, 모집 대상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스타트업이다.

KB금융과 협업이 가능한 금융·비금
융(핀테크, AI, 빅데이터, 웹툰, 부동
산, 헬스케어, 자동차, 통신, STO 등)

분야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면 모두 지
원 가능하다.

창진원과 KB금융이 공동으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 심사를 진행한 후
사업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여 4월 말 경 약 20여 개
의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하게 된다.

이번 모집과정에서 KB금융은 디지
털플랫폼 서비스 분야와 업무 효율화에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KB스타터스로 선정
된 스타트업에게는 ▲KB국민은행을비
롯한 KB금융 계열사와의 연계 협업 ▲
세무, 회계, 법률, 특허 등 내·외부 전문
가를 통한 경영 컨설팅 제공 ▲투자 유

치 지원 ▲채용 지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스타트업 전용 업무 공간 제공
등 성장 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창진원의 사업화 자금이 제공된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스타
트업 생태계와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혁신 스타
트업을 선발하여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KB스타터스 모집에 미래 혁신 기
술을 선도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스타트
업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과 창진원은 협약을 통
해 지난 2022년부터 총 32개 스타트업
에게 40억4000만원 규모의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BNK부산銀, 도전! 시니어 금융골든벨 실시

상으로 ‘도전! 시니어 금융골든벨’을 실시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30일부터 31일까
지 양일간 부산지역 시니어 900명을 대

/부산은행

전국 215만가구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안산 반월 산단 배후도시 등 108곳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적용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재
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
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
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난 수
치다. 여기에는 안산 반월공단 및 수도
권 1기신도시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
별법상 여기서는 안전진단 등이 모두
생략된다.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노
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
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
도시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
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
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
다. 여기에는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
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
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고, 구
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확
대됐다.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
도시 등 총 108곳, 215만가구가 노후계
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
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
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
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비
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 부산 5곳 ▲ 대구 10곳 ▲ 광주 6곳
▲ 대전 6곳 ▲ 울산 2곳 ▲ 강원 5곳 ▲
충북 8곳 ▲ 충남 1곳 ▲ 경북 2곳 ▲ 경
남 6곳 ▲ 전북 6곳 ▲ 전남 4곳 ▲ 제주
3곳이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
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
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에정구역
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용적률
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
다. 건폐율과 건물 간격은 국토계획
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이규성 기자 peace@